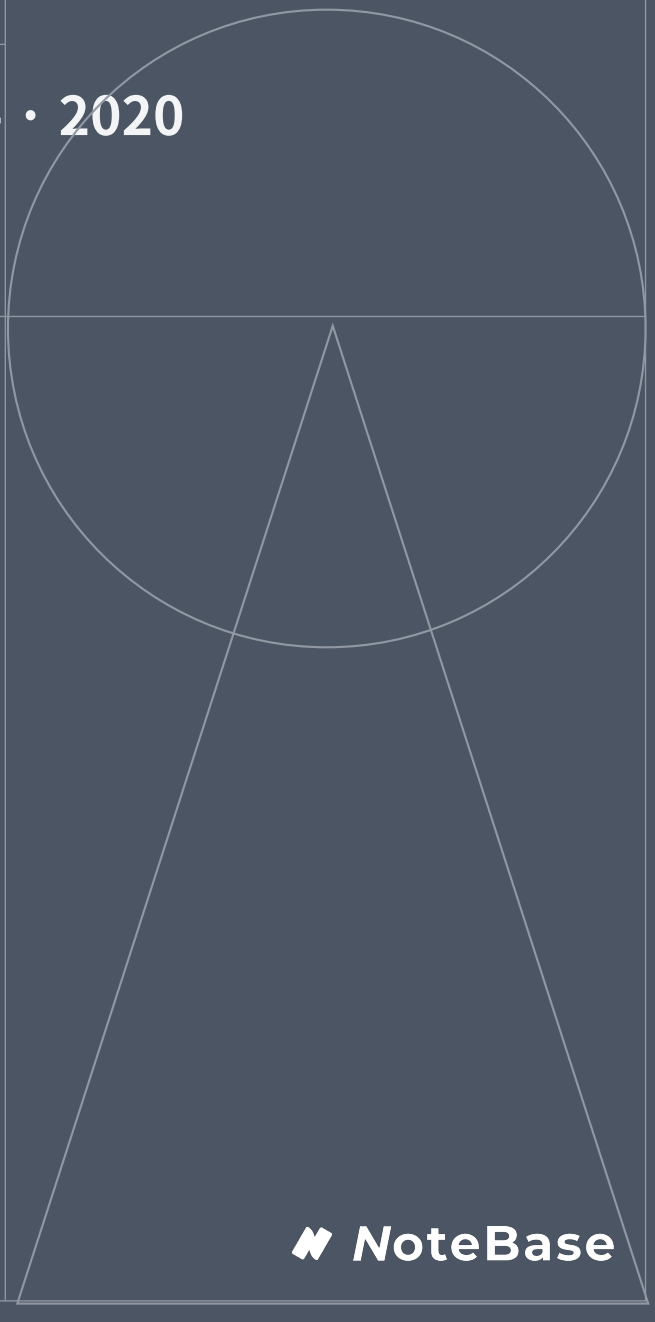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0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0

문 101.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한계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②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가변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한계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③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클 때는 평균총비용이 하락한다.

④ 한계비용곡선은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⑤ U자 모양의 평균총비용곡선 최저점의 산출량을 효율적 생산량이라고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의 관계, 그리고 비용곡선과 생산성의 역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계비용은 산출량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늘어나는 총비용이다. 임금이 일정하면 한계비용은 한계생산물과 반대로 움직여 한계생산물이 체감할수록 증가한다.
평균가변비용은 산출량 한 단위당 가변비용이며 평균생산물과 반대로 움직인다. 한계생산물이 평균생산물보다 작아지는 구간에서는 평균생산물이 하락하므로 평균가변비용이 상승한다.
한계값과 평균값의 관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이 상승하고, 작으면 평균비용이 하락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임금이 일정할 때 $MC = w/MPL$이므로 한계생산물 MPL이 체감하면 한계비용 MC는 증가한다.
② O — 한계생산물이 체감하여 평균생산물보다 작아지면 평균생산물이 하락한다. 임금이 일정할 때 $AVC = w/APL$이므로 평균가변비용은 상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평균총비용이 하락한다'이다.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크면 추가 생산분의 비용이 기존 평균보다 높으므로 평균총비용은 상승한다. 올바르게는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클 때 평균총비용이 상승한다'이다.
④ O —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을 때 평균총비용은 하락하고, 클 때는 상승하므로 두 곡선은 평균총비용의 최저점에서 만난다.
⑤ O — 평균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산출량은 단위당 총비용을 가장 낮게 만드는 산출량이므로 효율적 생산량이라고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크면 평균이 하락한다'고 방향을 뒤집은 선지이다. 또한 ①은 한계생산물과 한계비용, ②는 평균생산물과 평균가변비용의 관계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을 비교할 때는 새로 추가된 한계비용이 기존 평균을 끌어올리는지 내리는지를 판단한다. $MC > ATC$이면 ATC가 상승하고, $MC < ATC$이면 ATC가 하락하며, $MC = ATC$인 지점이 ATC의 최저점이다.

암기 포인트

한계가 평균보다 크면 평균은 상승하고, 한계가 평균보다 작으면 평균은 하락한다.

NoteBase

문 102. A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1,000개를 생산하고 전량 판매하고 있다. 이때 한계비용은 10원, 평균가변비용은 9원, 평균고정비용은 2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수입은 10,000원이다.

② 총비용은 11,000원이다.

③ 상품 개당 가격은 10원이다.

④ 총가변비용은 9,000원이다.

⑤ 단기에서는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P = MC$와 단기 조업중단 조건 $P < AVC$를 이용해 가격·수입·비용과 조업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량 Q는 1,000개, 한계비용 MC는 10원, 평균가변비용 AVC는 9원, 평균고정비용 AFC는 2원이다.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는 $P = MC$가 성립한다.
단기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가격이 평균가변비용 이상이면 생산을 계속한다.

사용할 공식

$P = MC$
$TR = P \times Q$
$TVC = AVC \times Q$
$TFC = AFC \times Q$
$ATC = AVC + AFC, \quad TC = ATC \times Q = TVC + TFC$
조업중단 여부는 단기 조업중단 조건 $P < AVC$로 판단한다. 고정비용은 생산을 중단해도 부담하므로 단기 조업 여부는 가격과 평균총비용이 아니라 가격과 평균가변비용을 비교해 결정한다.

계산 과정

1. 이윤극대화 조건에 따라 $P = MC = 10$원이므로 상품 가격은 10원이다.
2. 총수입은 $TR = 10 \times 1{,}000 = 10{,}000$원이다.
3. 총가변비용은 $TVC = 9 \times 1{,}000 = 9{,}000$원이고, 총고정비용은 $TFC = 2 \times 1{,}000 = 2{,}000$원이다.
4. 평균총비용은 $ATC = 9 + 2 = 11$원이므로 총비용은 $TC = 11 \times 1{,}000 = 11{,}000$원이다.
5. 이윤은 -1,000원이지만 $P = 10 > AVC = 9$이므로 가변비용 전부와 고정비용 일부를 회수할 수 있어 단기에는 생산을 계속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가격 10원에 1,000개를 판매하므로 총수입은 10,000원이다.
② O — 평균총비용은 11원이므로 총비용은 11,000원이다.
③ O —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P = MC$에 따라 상품 개당 가격은 10원이다.
④ O — 평균가변비용 9원에 생산량 1,000개를 곱하면 총가변비용은 9,000원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단기에서는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가격 10원이 평균가변비용 9원보다 높으므로 손실이 있더라도 단기에는 조업을 계속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총비용 11,000원이 총수입 10,000원보다 커서 1,000원의 손실이 난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조업중단을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단기 조업중단 기준은 손실 발생 여부나 $P < ATC$가 아니라 $P < AVC$이다. 이 기업은 생산하면 고정비용 중 1,000원을 회수하지만 중단하면 고정비용 2,000원 전부를 손실로 부담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기업 문제에서는 먼저 이윤극대화 조건 $P = MC$로 가격을 구하고, 평균비용에 생산량을 곱해 총액을 계산한다. 단기 조업 여부는 마지막에 P와 AVC를 비교하며, $P < AVC$일 때만 조업을 중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의 생산량 결정은 $P = MC$, 단기 조업중단은 $P < AVC$이다. 손실 발생과 조업중단은 같은 말이 아니다.

NoteBase

문 103.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가격은 매 시점마다 모든 관련 정보를 반영한다.
ㄴ. 주식가격은 랜덤워크(random walk)를 따른다.
ㄷ. 미래 주식가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ㄹ. 주식가격의 예측이 가능해도 가격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효율적 시장가설에서 주식가격이 정보를 반영한다는 의미와 그에 따른 가격변화의 예측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효율적 시장가설은 이용 가능한 관련 정보가 주식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그 정보만으로 지속적인 초과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가설이다.
정보가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새로운 정보는 예측하기 어렵게 도착하므로, 주식가격의 변화도 체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랜덤워크의 성격을 띤다.
ㄱ은 O, ㄴ은 O, ㄷ은 X, ㄹ은 X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은 모두 옳다. 주식가격은 매 시점의 관련 정보를 반영하며, 새 정보의 도착을 미리 알기 어려우므로 가격변화는 랜덤워크의 성격을 띤다.
② X — ㄷ의 '체계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가 틀렸다. 실제로는 미래 주식가격의 변화를 이용 가능한 정보로 체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 ㄷ이 틀렸다. 랜덤워크를 따른다는 ㄴ은 옳지만, 이는 오히려 가격변화의 체계적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ㄴ, ㄷ'이 아니라 'ㄱ, ㄴ'이 옳다.
④ X — ㄹ의 '가격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틀렸다. 예측 가능한 수익 기회가 발견되면 투자자들의 매매와 차익거래로 현재 가격이 조정되어 그 기회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ㄴ, ㄹ'이 아니라 'ㄱ, ㄴ'이 옳다.
⑤ X — ㄷ과 ㄹ이 모두 틀렸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가격변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 가능한 이익 기회가 나타나면 매매에 의해 가격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ㄷ, ㄹ'이 아니라 'ㄱ, ㄴ'이 옳다.

오답 포인트

ㄴ의 '랜덤워크'를 가격이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인다는 뜻으로 오해하거나, 일시적으로 발견한 예측 가능성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핵심은 새로운 정보가 예측하기 어렵게 도착하고, 알려진 수익 기회는 매매에 따른 가격조정으로 소멸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련 정보의 신속한 가격 반영', '가격변화의 체계적 예측 곤란', '예측 가능한 초과수익 기회의 가격조정에 의한 소멸'은 효율적 시장가설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고, 새 정보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수익 기회는 가격조정으로 사라진다.

NoteBase

문 104.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
ㄴ.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해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에 의해 외부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ㄷ. 배제불가능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 코우즈 정리의 성립 조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재: 일반적으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이다.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며, 무임승차 문제의 원인이 된다.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다.
코우즈 정리: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충분히 낮은 등의 조건에서는 이해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누락된 내용은 ㄴ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② X
ㄴ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누락된 내용은 ㄱ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③ O
ㄱ과 ㄴ은 모두 옳고 ㄷ은 틀리므로 'ㄱ, ㄴ'이 정확한 조합이다. ㄱ은 비배제성에서 비롯되는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 공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부족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ㄴ은 일정한 조건에서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코우즈 정리의 내용이다.

④ X
ㄷ이 틀렸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ㄷ의 '배제불가능성'은 '비경합성'으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⑤ X
ㄷ이 틀렸으므로 세 문장을 모두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다. ㄷ의 '배제불가능성'은 '비경합성'으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ㄷ은 공공재의 두 속성을 바꾸어 표현한 함정이다.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소비자 간 경합 여부를 말하므로 비배제성이 아니라 비경합성이다. 또한 '옳은 것을 모두' 묻기 때문에 개별 진술이 맞더라도 옳은 진술을 일부 누락한 ①과 ②는 정답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비에서 사람을 막을 수 있는지를 물으면 비배제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줄이는지를 물으면 비경합성으로 판단한다. 각 진술의 O/X를 먼저 확정한 뒤 그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조합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배제는 '막을 수 있는가', 경합은 '함께 소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공공재의 비배제성은 무임승차와 공급 부족을 낳을 수 있다.

NoteBase

문 105.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의 생산량은 순수독점의 경우보다 더 작아진다.

②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기업은 가격탄력성이 더 작은 시장에서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한다.

③ 가격차별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④ 소비자의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가격차별이 유지되기 어렵다.

⑤ 완전가격차별의 사회적 후생은 순수독점의 경우보다 크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가격차별의 성립 조건과 시장별 가격 결정, 생산량 및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격차별은 동일한 재화를 비용 차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제3급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를 시장별로 분리하고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공통 한계비용과 같게 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시장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완전가격차별에서는 각 소비자의 지불의사만큼 가격을 받아 한계지불의사와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생산하므로 단일가격 독점보다 생산량과 총잉여가 커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생산량은 순수독점의 경우보다 더 작아진다'이다. 가격차별의 유형과 수요 조건에 따라 단일가격 독점과 비교한 총생산량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완전가격차별에서는 단일가격 독점보다 생산량이 늘어난다.

② O
독점기업은 각 시장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킨다. 그 결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시장은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가 작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

③ O
가격차별은 소비자 집단별 지불액과 소비자잉여를 달리하므로 소비자 사이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소득분배를 변화시킬 수 있다.

④ O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높은 가격의 시장에 재판매할 수 있으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축소된다. 따라서 시장 간 재판매를 막을 수 있어야 가격차별이 유지된다.

⑤ O
완전가격차별에서는 독점기업이 지불의사가 한계비용 이상인 단위까지 판매한다. 단일가격 독점에서 거래되지 않던 단위도 생산되어 사중손실이 제거되므로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독점기업이므로 생산량을 줄인다'는 단일가격 독점의 성질을 가격차별에도 그대로 적용한 데 있다. 가격차별은 추가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흡수하여 판매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완전가격차별에서는 생산량이 경쟁적 수준까지 증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차별 문항은 시장 분리 가능성, 재판매 방지, 탄력성과 가격의 역관계, 생산량·총잉여의 변화를 차례로 확인한다. 특히 완전가격차별은 생산량 증가, 소비자잉여의 생산자 이전, 사중손실 제거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은 높고, 재판매가 가능하면 가격차별은 무너지며, 완전가격차별은 생산량과 총잉여를 늘린다.

NoteBase

문 106. 국제무역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후생의 증가

② 보다 다양한 소비 기회의 제공

③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발생

④ 수입으로 인한 동일제품 국내 생산자의 후생 증가

⑤ 경쟁의 촉진으로 국내 독과점 시장의 시장실패 교정 가능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제무역이 사회 전체의 후생과 소비 기회, 기업의 생산 여건에 미치는 효과와 수입 경쟁으로 생기는 집단별 후생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교역국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소비 가능성과 총후생을 늘린다.
다만 무역의 이익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생산자는 가격 하락과 판매 감소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다양한 상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제무역은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환을 통해 교역으로 얻는 이익을 만들므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O — 해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소비 조합이 다양해진다.
③ O — 국내시장에만 판매할 때보다 더 큰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생산량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누릴 기회가 생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동일제품 국내 생산자의 후생 증가'이다. 수입품 유입으로 국내 가격이 낮아지고 판매량이 줄면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자잉여와 후생은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수입으로 동일제품의 국내 소비자 후생은 증가할 수 있지만, 국내 생산자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이다.
⑤ O — 수입품은 국내 독과점 기업에 경쟁 압력을 가하므로 가격 인하와 효율성 개선을 유도하여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완화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무역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모든 경제주체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④를 놓치기 쉽다. 총후생의 증가와 수입 경쟁 국내 생산자의 손실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 효과는 먼저 사회 전체의 순효과와 집단별 분배효과를 나누어 판단한다. 수입이 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이익을 얻고,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생산자는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무역은 총후생을 늘릴 수 있지만, 수입 경쟁 국내 생산자까지 반드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07. 독점기업 A의 수요곡선, 총비용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독점이윤극대화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 수요곡선 : $P = -Q + 20$
◯ 총비용곡선 : $TC = 2Q + 10$

① 99/2
② 94/2
③ 88/2
④ 81/2
⑤ 77/2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수량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량을 구한 뒤, 두 수량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중손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P = 20 - Q$이고 총비용곡선은 $TC = 2Q + 10$이다.
한계비용은 $MC = 2$이다. 총비용의 고정비용 10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한계비용과 사중손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량은 $P = MC$에서 결정된다.

사용할 공식

총수입은 $TR = P \cdot Q = (20 - Q)Q = 20Q - Q^2$이므로 한계수입은 $MR = 20 - 2Q$이다.
사중손실은 독점수량과 효율적 수량 사이에서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이다.
$DWL = \frac{1}{2} \times (Q_e - Q_m) \times (P_m - MC)$
독점으로 거래되지 않은 구간의 순편익을 합한 값이므로 이 삼각형 넓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독점수량은 $MR = MC$에서 구한다.
$20 - 2Q = 2 \Rightarrow Q_m = 9$
2. 독점가격은 수요곡선에 $Q_m = 9$를 대입해 구한다.
$P_m = 20 - 9 = 11$
3. 효율적 수량은 $P = MC$에서 구한다.
$20 - Q = 2 \Rightarrow Q_e = 18$
4. 사중손실을 계산한다.
$DWL = \frac{1}{2} \times (18 - 9) \times (11 - 2) = \frac{81}{2}$

선지 판단

① X — 99/2는 계산된 사중손실 81/2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81/2이다.
② X — 94/2는 독점수량과 효율적 수량의 차이 9 및 높이 9로 계산한 삼각형 넓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81/2이다.
③ X — 88/2는 $\frac{1}{2} \times 9 \times 9$의 결과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81/2이다.
④ O — 독점으로 줄어든 거래량은 $18 - 9 = 9$, 삼각형의 높이는 $11 - 2 = 9$이므로 사중손실은 $\frac{1}{2} \times 9 \times 9 = 81/2$이다.
⑤ X — 77/2는 계산된 삼각형 넓이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81/2이다.

오답 포인트

총비용의 상수항 10을 한계비용에 포함하는 실수가 핵심 함정이다. $TC = 2Q + 10$을 생산량으로 미분하면 $MC = 2$이며 고정비용 10은 사라진다. 또한 독점수량은 수요곡선이 아니라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수요 독점의 사중손실은 먼저 $MR = MC$로 독점수량과 가격을 구하고, 다음으로 $P = MC$로 효율적 수량을 구한 뒤, 두 수량 사이의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드는 삼각형 넓이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은 $MR = MC$, 효율은 $P = MC$, 사중손실은 두 수량 사이의 삼각형 넓이이다.

NoteBase

문 108. 양의 효용을 주는 X재와 Y재가 있을 때, 소비자의 최적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의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두 재화의 시장 가격비율이 1보다 커야 한다.

② X재 1원당 한계효용이 Y재 1원당 한계효용보다 클 때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화된다.

③ 가격소비곡선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한 상품의 가격만 변할 때, 소비자의 최적선택점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④ 예산제약이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소비자의 예산범위를 넘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⑤ 예산선의 기울기는 한 재화의 한계효용을 의미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의 최적선택 조건, 예산제약, 가격소비곡선, 예산선 기울기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비자의 최적선택은 주어진 소득과 가격 아래에서 예산제약을 만족하면서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묶음이다.
내부해에서는 두 재화의 원당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MU_X/P_X = MU_Y/P_Y$가 성립한다.
가격소비곡선은 소득과 다른 재화의 가격 등이 일정할 때 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최적 소비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예산제약은 총지출이 소득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며, 예산선의 기울기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시장 가격비율이 1보다 커야 한다는 부분이다. 효용극대화에 가격비율이 반드시 1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며, 내부해의 최적조건은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이 일치하는 것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X재 1원당 한계효용이 Y재 1원당 한계효용보다 클 때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부분이다. 이때에는 지출을 Y재에서 X재로 옮겨 효용을 더 높일 수 있으므로 내부해가 아니며, 올바른 조건은 $MU_X/P_X = MU_Y/P_Y$이다.
③ O —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한 재화의 가격만 변할 때 나타나는 소비자의 최적선택점들을 연결한 것이 가격소비곡선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상품의 양이 소비자의 예산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부분이다. 상품의 양과 예산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올바르게는 선택한 소비묶음의 총지출이 소득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즉, $P_X X + P_Y Y \le M$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한 재화의 한계효용이라는 부분이다. X재를 가로축, Y재를 세로축에 두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P_X/P_Y$로, 한계효용이 아니라 상대가격과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경제학의 예산제약은 상품의 물리적 양이 아니라 가격을 반영한 총지출과 소득의 관계이다. 또한 ②의 원당 한계효용은 대소관계가 아니라 내부해에서의 등식이 최적조건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 변화에 따른 최적점의 이동은 가격소비곡선, 총지출과 소득의 관계는 예산제약, 예산선의 기울기는 상대가격으로 연결한다. 내부해의 효용극대화 조건은 두 재화의 원당 한계효용이 같은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내부해는 원당 한계효용의 균등, 예산선 기울기는 상대가격, 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최적점의 자취는 가격소비곡선이다.

NoteBase

문 109. X재의 공급함수가 $Q = P - 6$일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 Q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P-6)/P$

② $(P+6)/P$

③ $(-P+6)/P$

④ $P/(P+6)$

⑤ $P/(P-6)$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공급의 점가격탄력성 공식에 공급함수의 기울기와 해당 점의 가격·공급량을 대입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공급함수는 $Q = P - 6$이다.
가격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은 $dQ/dP = 1$이다.
구해야 할 값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다.

사용할 공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E_s = \frac{dQ}{dP} \cdot \frac{P}{Q}$
이다.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두 변수의 변화율 비율로 나타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공급함수 $Q = P - 6$을 가격 P에 대해 미분하면 $dQ/dP = 1$이다.
이를 탄력성 공식에 대입하면
$E_s = 1 \cdot \frac{P}{P-6} = \frac{P}{P-6}$
이 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P-6)/P$는 Q/P로, 탄력성 공식의 P/Q를 거꾸로 쓴 값이다. 올바르게는 $P/(P-6)$이다.
② X — $(P+6)/P$는 공급함수의 절편 부호를 바꾸고 탄력성의 비율도 잘못 구성한 값이다. $Q=P-6$을 그대로 사용하면 올바른 값은 $P/(P-6)$이다.
③ X — $(-P+6)/P$는 $-(P-6)/P$로, 공급함수의 기울기 $dQ/dP=1$을 음수로 처리하고 비율까지 거꾸로 쓴 값이다. 올바르게는 $P/(P-6)$이다.
④ X — $P/(P+6)$은 공급량을 $P+6$으로 잘못 대입한 값이다. 공급함수에서 $Q=P-6$이므로 올바르게는 $P/(P-6)$이다.
⑤ O — $dQ/dP=1$, $Q=P-6$을 $E_s=(dQ/dP)(P/Q)$에 대입하면 $P/(P-6)$이 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탄력성 공식의 비율을 Q/P로 뒤집거나, 공급함수의 상수항 -6을 $+6$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울기만 구한 뒤 끝내지 않고 반드시 해당 점의 P/Q를 곱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급함수에서 먼저 dQ/dP를 구하고, 다음으로 주어진 함수에서 Q를 확인한 뒤, $E_s=(dQ/dP)(P/Q)$의 순서로 대입한다.

암기 포인트

공급의 점가격탄력성은 '공급함수의 기울기 × 가격/공급량', 즉 $E_s=(dQ/dP)(P/Q)$이다.

NoteBase

문 110. 소비자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비교는 절대값으로 한다.)

① 정상재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한다.

② 정상재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으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한다.

③ 열등재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한다.

④ 열등재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으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한다.

⑤ 기펜재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가격 상승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수요량에 미치는 방향을 정상재·열등재·기펜재별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효과: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효과이다.
소득효과: 가격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수요량의 변화이다. 정상재는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대체효과와 방향이 같고, 열등재는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대체효과와 방향이 반대이다.
기펜재: 열등재 가운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량 증가 방향의 소득효과가 수요량 감소 방향의 대체효과보다 커서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정상재는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대체효과가 더 큰 경우에도 총효과는 수요량 감소이다.
② O — 정상재에서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도 총효과는 수요량 감소이다.
③ O — 열등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효과는 수요량을 감소시키고 소득효과는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대체효과가 더 크면 총효과는 수요량 감소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수요량은 감소한다"이다. 열등재에서 수요량 증가 방향의 소득효과가 수요량 감소 방향의 대체효과보다 크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며, 이 경우 그 재화는 기펜재가 된다.
⑤ O — 기펜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므로 수요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에서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려 하면 혼동하기 쉽다. 정상재는 두 효과의 방향이 모두 수요량 감소이므로 크기와 관계없이 가격 상승 시 수요량이 감소한다. 반면 ④의 열등재는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어느 효과가 더 큰지가 총효과를 결정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를 수요량 감소로 고정한다. 그다음 정상재의 소득효과는 감소, 열등재의 소득효과는 증가로 표시한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면 크기를 비교하지 않고, 반대 방향이면 절대값이 더 큰 효과의 방향으로 총효과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상재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이고, 열등재는 반대 방향이다. 열등재에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기펜재이다.

NoteBase

문 111. 벤담(J. Bentham)의 공리주의를 표현한 사회후생함수는? (단, 이 경제에는 갑, 을만 존재하며, W는 사회전체의 후생, U는 갑의 효용, V는 을의 효용이다.)

① $W = \max(U, V)$

② $W = \min(U, V)$

③ $W = U + V$

④ $W = U \times V$

⑤ $W = U/V$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벤담의 공리주의와 개인 효용의 합으로 나타내는 총효용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벤담의 공리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을 합산한 총효용이 클수록 사회후생이 높다고 본다. 갑과 을만 존재하면 사회후생함수는 $W = U + V$이다. 각 개인의 효용에 같은 가중치를 부여하지만, 효용분배의 균등성 자체를 별도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W = \max(U, V)$는 두 사람 중 효용이 더 큰 사람의 효용만 사회후생에 반영하므로 개인 효용을 모두 합산하는 벤담식 함수가 아니다. 벤담식으로 고치면 $W = U + V$이다.

② X
$W = \min(U, V)$는 효용이 가장 낮은 사람의 효용을 기준으로 사회후생을 판단하는 롤스식 최소극대화 관점에 해당한다. 벤담식으로 고치면 $W = U + V$이다.

③ O
$W = U + V$는 갑과 을의 효용을 합산하므로 총효용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정확히 표현한다.

④ X
$W = U \times V$는 개인 효용의 곱을 사용하는 형태이며, 개인 효용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 벤담식 함수가 아니다. 벤담식으로 고치면 $W = U + V$이다.

⑤ X
$W = U/V$는 갑의 효용과 을의 효용 사이의 비율을 나타낼 뿐 총효용을 나타내지 않는다. 벤담식으로 고치면 $W = U + V$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의 최저효용, ④의 효용 곱처럼 사회후생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형태를 벤담의 공리주의와 혼동하게 하는 데 있다. 벤담의 핵심은 분배 방식이나 효용의 비율이 아니라 모든 개인 효용의 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벤담 또는 총효용주의가 제시되면 사회구성원 각자의 효용을 더한 $W = \sum_i U_i$ 형태인지 확인한다. 최저효용을 기준으로 하면 롤스식이고, 효용의 곱이나 비율은 벤담식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벤담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개인 효용의 합 $W = U + V$이다.

NoteBase

문 112.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① 통화정책은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② 유동성함정에 빠진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③ 화폐의 중립성에 따르면, 통화량을 늘려도 명목임금은 변하지 않는다.

④ 구축효과란 정부지출 증가가 소비지출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은 모두 경기팽창효과가 있으며, 국민소득의 각 구성요소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총수요 전달 경로, 유동성함정, 화폐의 중립성, 구축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화정책은 통화량 변화가 이자율과 투자를 거쳐 총수요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이나 조세의 변화로 총수요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유동성함정에서는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매우 탄력적이어서 통화량 증가가 이자율을 더 낮추기 어렵다.
화폐의 중립성은 통화량 변화가 장기적으로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물가·명목임금 같은 명목변수만 변화시킨다는 명제이다.
구축효과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통화량 변화는 이자율을 변화시키고, 이자율 변화는 투자와 총수요를 거쳐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② X. 틀린 표현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이다.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량이 늘어도 이자율이 더 낮아지기 어려워 투자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확장적 통화정책이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어렵다.
③ X. 틀린 표현은 '명목임금은 변하지 않는다'이다. 화폐의 중립성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실질임금과 실질산출량은 변하지 않지만 물가와 명목임금 같은 명목변수는 통화량에 따라 변할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소비지출 감소'이다. 표준적인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⑤ X. 틀린 표현은 '국민소득의 각 구성요소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이다. 두 정책 모두 총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을 직접 늘리고 이자율 상승을 통해 투자를 일부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을 통해 투자를 늘리므로 구성요소별 효과가 다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일반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유동성함정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③은 '실질변수 불변'을 '명목변수 불변'으로 바꾸었고, ④는 구축효과의 감소 대상을 투자에서 소비로 바꾸었다. ⑤는 두 정책의 총수요 확대라는 공통점과 전달 경로·지출 구성의 차이를 혼동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의 효과는 '정책수단 → 이자율 또는 직접지출 → 소비·투자·정부지출 → 총수요와 국민소득'의 순서로 판단한다. 유동성함정이면 통화정책의 이자율 경로가 약해지고, 화폐의 중립성이 제시되면 실질변수와 명목변수를 구분하며, 구축효과가 제시되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 감소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통화정책은 이자율·투자 경로,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정책 무력화, 화폐중립성은 실질 불변·명목 변화, 구축효과는 민간투자 감소이다.

NoteBase

문 113. 거시경제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총생산은 영토를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은 국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국내총생산 삼면등가의 법칙은 폐쇄경제에서 생산, 지출, 분배 국민소득이 항등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③ 국내총생산은 특정 시점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이다.

④ 국민총생산은 국내총생산과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의 합이다.

⑤ 국내총소득은 국내총생산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의 합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GDP·GNP·GDI의 계산 기준과 국민소득지표가 유량인지 저량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합계이다.
국민총생산(GNP)은 일정 기간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재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합계이다.
국내총소득(GDI)은 국내 생산으로 얻은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며,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반영한다.
GDP·GNP·GDI는 모두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유량변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GDP는 생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영토에서 이루어진 생산을 기준으로 하고, GNP는 생산 장소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의 생산을 기준으로 한다.
② O — 폐쇄경제에서는 생산된 최종재의 가치가 지출되고 그 금액이 생산요소의 소득으로 분배되므로 생산·지출·분배 국민소득이 사후적으로 같다.
③ X — 틀린 표현은 '특정 시점'이다. GDP는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므로, 올바르게는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이다.
④ O — 국외에서 자국 국민이 받은 요소소득에서 국내에서 외국인이 받은 요소소득을 뺀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을 GDP에 더하면 GNP가 된다.
⑤ O — GDI는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로 발생한 실질 무역손익을 더해 국내 생산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③의 '특정 시점'은 국부나 자산처럼 한 시점에 측정하는 저량변수의 표현이다. GDP는 생산활동을 집계하므로 '일정 기간'에 측정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소득·지출처럼 경제활동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는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유량이고, 자산·부채·국부처럼 축적된 크기는 특정 시점에 측정하는 저량이다. GDP는 영토, GNP는 국민, GDI는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구매력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GDP는 영토·기간, GNP는 국민·기간, GDI는 GDP에 실질 무역손익을 반영한 지표이다.

NoteBase

문 114.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상소득이론에서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② 생애주기이론에서 소비는 미래소득의 영향을 받는다.

③ 절대소득가설에서는 현재 처분가능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④ 처분가능소득의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은 1이다.

⑤ 절대소득가설이 항상소득이론보다 한시적 소득세 감면의 소비 진작 효과를 더 크게 평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절대소득가설·항상소득이론·생애주기이론이 소비를 결정하는 소득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대소득가설: 현재 처분가능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현재 소비를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현재소득의 변화가 소비에 직접 반영된다.
항상소득이론: 소비자가 일시소득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항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생애주기이론: 소비자가 현재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과 보유자산을 포함한 생애 전체의 자원을 고려하여 소비를 평탄화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이다. 항상소득이론에서는 지속되는 항상소득의 증가가 소비를 크게 늘리지만, 일시소득의 증가는 주로 저축되므로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작다. 올바르게는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이다.
② O — 생애주기이론의 소비자는 생애 전체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소비하므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소득도 현재 소비에 영향을 준다.
③ O — 절대소득가설에서는 현재 처분가능소득의 절대적 크기를 현재 소비의 핵심 결정요인으로 본다.
④ O — 처분가능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나뉘므로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 증가분의 비율과 저축 증가분의 비율을 합하면 1이다.
⑤ O — 절대소득가설은 한시적 감세로 늘어난 현재 처분가능소득이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본다. 반면 항상소득이론은 이를 지속되지 않는 일시소득의 증가로 보므로 소비 진작 효과를 더 작게 평가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 크기를 서로 뒤바꾼 선지이다. ⑤에서는 '한시적' 감세가 항상소득이 아니라 일시소득을 늘린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 변화가 지속적인지 일시적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지속적 변화라면 항상소득과 소비가 크게 변하고, 일시적 변화라면 항상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아 소비 반응이 작다. 현재 처분가능소득 자체를 강조하면 절대소득가설, 생애 전체의 소득과 자산을 강조하면 생애주기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소득은 현재소득, 항상소득은 지속소득, 생애주기는 평생자원이다.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NoteBase

문 115. 중앙은행의 화폐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금창조기능은 중앙은행의 독점적 기능이다.

② 본원통화는 현금과 은행의 예금을 합친 것이다.

③ 중앙은행이 민간에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④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하면 기업은 경기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⑤ 법정지급준비율은 통화승수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의 역할, 본원통화의 구성, 공개시장조작·재할인율·법정지급준비율이 통화량에 미치는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본원통화는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이 중앙은행에 보유한 지급준비금의 합계이다.
통화승수는 본원통화가 예금과 통화량의 몇 배로 확대되는지를 나타내며, 법정지급준비율이 그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과 재할인율 인하는 통화공급을 늘리는 방향이고, 국채 매각과 재할인율 인상은 통화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예금창조는 일반은행이 예금을 받고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긴 뒤 나머지를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틀린 표현은 '중앙은행의 독점적 기능'이며, 올바르게는 일반은행 체계의 기능이다.

② X
본원통화의 은행 관련 항목은 고객의 은행예금이 아니라 은행이 보유한 지급준비금이다. 틀린 표현은 '현금과 은행의 예금'이며, 올바르게는 '민간 보유 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합이다.

③ X
중앙은행이 민간에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 대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본원통화가 감소하고, 통화량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틀린 표현은 '통화량이 증가한다'이며, 올바르게는 '통화량이 감소한다'이다.

④ X
재할인율 인하는 은행의 중앙은행 차입 비용을 낮춰 대출과 통화공급을 늘리려는 확장적 통화정책 신호이다. 틀린 표현은 '경기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신호'이며, 올바르게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호'이다.

⑤ O
법정지급준비율이 달라지면 은행이 예금 중 대출할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예금창조의 크기와 통화승수가 변한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는 일반인이 은행에 맡긴 예금과 은행이 중앙은행에 보유한 지급준비금을 혼동하기 쉽다. 또한 ③의 국채 매각과 ④의 재할인율 인하가 통화량에 미치는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앙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인지 회수하는 조치인지 먼저 판단한다. 국채 매입·재할인율 인하·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량 증가 방향이고, 국채 매각·재할인율 인상·지급준비율 인상은 통화량 감소 방향이다.

암기 포인트

본원통화는 현금과 지급준비금, 예금창조는 일반은행, 법정지급준비율은 통화승수에 영향을 미친다.

NoteBase

문 116.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물가지수는 재화의 품질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②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GDP를 명목GDP로 나눈 수치이다.

③ 소비자물가지수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생계비의 변화를 과대평가한다.

④ 소비자물가지수는 재화 선택의 폭이 증가함에 따른 화폐가치의 상승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⑤ 소비자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와 달리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화의 가격 변화도 반영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물가지수의 측정상 한계와 GDP 디플레이터의 산식·포괄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기준시점의 대표 소비 바구니를 구입하는 비용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고정된 소비 바구니를 사용하므로 대체편의가 생기며, 품질 변화와 새로운 재화가 주는 편익을 완전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산식은 (명목GDP)/(실질GDP)×100이다.
포괄 범위의 핵심 차이는 CPI는 소비자가 구입한 수입 소비재를 포함할 수 있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생산물만 대상으로 하므로 수입품을 제외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품질 향상분과 순수한 가격 상승분을 정확히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물가지수에는 품질 변화 반영의 한계가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실질GDP를 명목GDP로 나눈 수치'이다. 올바르게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 (명목GDP)/(실질GDP)×100이 GDP 디플레이터이다.
③ O — 소비자물가지수는 고정된 소비 바구니를 사용한다. 상대가격이 오른 재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재화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대체행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생계비 상승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④ O — 새로운 재화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과 구매력의 실질적 가치가 커져도 고정된 소비 바구니 방식은 그 편익을 즉시 충분히 측정하지 못한다.
⑤ O —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 소비재의 가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반면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만 포함하므로 수입재 가격 변화는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GDP 디플레이터의 분자와 분모를 뒤바꾼 선지이다. 또한 ⑤에서는 '누가 구입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CPI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GDP 디플레이터의 범위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 디플레이터의 산식은 현재가격으로 평가한 명목GDP를 기준연도가격으로 평가한 실질GDP로 나누는 구조로 판단한다. 지수의 포괄 범위는 CPI는 소비자 구입 여부,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생산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실질', CPI는 수입 소비재 포함·고정 바구니 편의이다.

NoteBase

문 117. 단기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목임금이 일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 변동하지 못한 경우

② 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가격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③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여, 통화량 증가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④ 일반적인 물가 상승을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착각하는 경우

⑤ 메뉴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가격 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단기총공급곡선의 우상향을 설명하는 명목임금·가격의 경직성과 물가수준에 대한 오인 이론을 화폐의 중립성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총공급곡선은 실제 물가수준이 예상 물가수준보다 높아질 때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명목임금 경직성: 임금이 물가 변화에 즉시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 시 실질임금과 생산비용이 낮아지고 생산량이 증가한다.
가격 경직성: 가격 변경의 비용이나 계약 등으로 일부 기업의 가격이 즉시 조정되지 않아 수요 증가에 생산량으로 대응한다.
불완전정보·오인: 생산자가 일반 물가 상승을 자기 재화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오인하여 생산량을 늘린다.
화폐의 중립성: 통화량 변화가 명목변수만 바꾸고 실질생산량 같은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이는 장기총공급의 설명에 가깝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명목임금이 일반 물가 상승에 맞추어 즉시 오르지 않으면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기업의 실질 노동비용이 낮아져 고용과 생산이 늘어나므로 단기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
② O — 기업이 수요 변화에 맞추어 가격을 수시로 바꾸기 어렵다면 가격이 경직적이다. 총수요가 증가할 때 기업은 가격만 올리지 못하고 생산량도 늘리므로 단기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통화량 증가는 물가 같은 명목변수만 변화시키고 실질생산량은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우상향하는 단기총공급곡선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단기에는 임금·가격의 경직성이나 오인 때문에 화폐의 비중립성이 나타나 통화량 변화가 실질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④ O — 생산자가 일반적인 물가 상승을 자기 재화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오인하면 자신의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판단하여 생산량을 확대한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물가와 생산량이 함께 증가하는 이유가 된다.
⑤ O — 메뉴비용은 가격표·시스템·홍보물 등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으로, 기업의 즉각적인 가격 조정을 저해한다. 가격 경직성이 생기면 수요 증가의 일부가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단기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난다는 익숙한 문장을 이용한 함정이다. 핵심은 물가가 오르는지 자체가 아니라 통화량 변화가 실질생산량에도 영향을 주는지이다. 화폐의 중립성은 실질효과가 없다는 뜻이므로 단기총공급의 우상향을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가격이 즉시 조정되지 않거나 경제주체가 일반 물가와 상대가격을 혼동하면 단기총공급곡선의 우상향 원인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화폐의 중립성처럼 명목변수와 실질변수를 분리하는 설명은 장기의 수직 총공급곡선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단기 우상향은 임금 경직성·가격 경직성·오인, 장기 수직은 화폐 중립성이다.

NoteBase

문 118. A국의 소비지출(C),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순수출(Xn), 조세징수액(T)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고,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는 고정되어 있으며, 수요가 존재하면 공급은 언제나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 $C = 300 + 0.8(Y - T)$
◯ I: 300
◯ G: 500
◯ Xn: 400
◯ T: 500

① 균형국민소득은 4,000이다.
② 정부지출이 10 증가하는 경우 균형국민소득은 30 증가한다.
③ 조세징수액이 10 감소하는 경우 균형국민소득은 30 증가한다.
④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액을 각각 100씩 증가시키면 균형국민소득은 100 증가한다.
⑤ 정부지출승수는 투자승수보다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케인스 단순모형에서 균형국민소득을 구하고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소비함수는 $C = 300 + 0.8(Y - T)$이고 한계소비성향은 0.8이다.
투자지출은 300, 정부지출은 500, 순수출은 400, 조세징수액은 500이다.
물가와 금리 등이 고정되고 수요만큼 공급되는 조건이므로 총수요와 국민소득이 일치하는 $Y = C + I + G + Xn$을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균형국민소득은 $Y = C + I + G + Xn$이다.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모두 $\frac{1}{1-c}$이고, 정액세 조세승수는 $-\frac{c}{1-c}$이다. 여기서 c는 한계소비성향이다.
정부지출과 정액세를 같은 금액만큼 늘릴 때의 균형재정승수는 $\frac{1}{1-c} - \frac{c}{1-c} = 1$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소비는 $C = 300 + 0.8(Y - 500) = 0.8Y - 100$이다.
2. 균형식은 $Y = (0.8Y - 100) + 300 + 500 + 400$이므로 $Y = 0.8Y + 1{,}100$이다.
3. 따라서 $0.2Y = 1{,}100$, 즉 균형국민소득은 $Y = 5{,}500$이다.
4.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각각 $\frac{1}{1-0.8} = 5$이고, 조세승수는 $-\frac{0.8}{1-0.8} = -4$이다.

선지 판단

① X — 균형국민소득은 4,000이 아니라 5,500이다. 틀린 표현 '4,000'은 '5,5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정부지출승수는 5이므로 정부지출이 10 증가하면 균형국민소득은 $5 \times 10 = 50$ 증가한다. 틀린 표현 '30 증가'는 '50 증가'로 고쳐야 한다.
③ X — 조세승수는 -4이므로 조세징수액이 10 감소하면 균형국민소득은 $(-4) \times (-10) = 40$ 증가한다. 틀린 표현 '30 증가'는 '40 증가'로 고쳐야 한다.
④ O —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액을 각각 100씩 증가시키면 정부지출 증가로 국민소득이 500 증가하고 조세 증가로 400 감소하므로 순증가액은 100이다.
⑤ X — 정부지출과 투자는 모두 총수요의 자율지출이므로 승수가 각각 5로 같다. 틀린 표현 '정부지출승수는 투자승수보다 크다'는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같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정부지출승수 5와 조세승수 -4를 혼동하면 ②와 ③의 변화액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특히 조세 감소는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늘리므로 조세승수 -4에 음의 조세변화량을 곱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④는 정부지출 효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세 증가의 반대 효과까지 합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소비함수를 균형식에 대입해 최초 균형소득을 구한다. 정책 변화는 정부지출승수 $\frac{1}{1-c}$와 조세승수 $-\frac{c}{1-c}$를 각각 적용한 뒤 합산한다. 정부지출과 정액세가 같은 금액만큼 변하면 균형재정승수 1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같고, 정액세 조세승수는 절댓값이 그보다 작다. 정부지출과 정액세를 같은 금액만큼 늘리면 국민소득은 그 금액만큼 증가한다.

NoteBase

문 119.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이득을 보고 채무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② 피셔(I. Fisher)가설에 따르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미미하다.

③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금전거래에서 장기계약보다 단기계약을 더 회피하도록 만든다.

④ 경기호황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⑤ 인플레이션 조세는 정부가 화폐공급량을 줄여 재정수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예상 여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재분배 효과와 사회적 비용, 스태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 조세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상된 인플레이션: 경제주체가 물가상승률을 미리 예상하여 이자율·임금·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물가상승으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부가 재분배되는 인플레이션이다.
피셔 가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상승하여 실질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설이다. 이를 근사식으로 쓰면 $i = r + \pi^e$이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 조세: 정부의 화폐 발행으로 물가가 올라 민간이 보유한 화폐의 실질가치가 감소하는 효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고정된 명목금액으로 상환하는 채무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채무자가 이득을 보고 채권자가 손해를 본다. 틀린 표현인 '채권자가 이득을 보고 채무자가 손해'는 '채무자가 이득을 보고 채권자가 손해'로 고쳐야 한다.
② O — 피셔 가설에 따르면 예상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에 반영되어 실질이자율과 실질적인 대차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부의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아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미미하다고 본다.
③ X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계약 기간이 길수록 누적되고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기계약보다 장기계약을 더 회피하게 된다. 틀린 표현인 '장기계약보다 단기계약을 더 회피'는 '단기계약보다 장기계약을 더 회피'로 고쳐야 한다.
④ X — 경기호황 속 물가상승은 일반적인 경기확장기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에 가깝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틀린 표현인 '경기호황'은 '경기침체'로 고쳐야 한다.
⑤ X — 인플레이션 조세는 정부가 화폐공급량을 늘려 재정수입을 얻고, 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민간 화폐보유자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틀린 표현인 '화폐공급량을 줄여'는 '화폐공급량을 늘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인플레이션의 채권자·채무자 효과를 반대로 제시하고, ③은 회피하는 계약 기간을 반대로 제시한다. ④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기침체'를 '경기호황'으로 바꾸었고, ⑤는 화폐공급의 증가를 감소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면 채무의 실질가치가 줄어 채무자가 유리하고 장기계약이 더 위험하다. 이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침체+물가상승', 인플레이션 조세는 '화폐발행 증가+화폐 실질가치 하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예상 밖 물가상승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피셔 가설에서는 예상물가가 명목이자율에 반영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침체 속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조세는 화폐발행에 따른 구매력 감소이다.

NoteBase

문 120.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보험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켜 자연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② 경기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 한다.

③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따르면 높은 임금 책정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용자의 시도가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

④ 내부자-외부자가설(insider-outsider hypothesis)에 따르면 내부자가 임금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우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최저임금제도는 구조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실업의 유형과 임금 경직성을 만드는 제도가 실업 및 자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일자리의 탐색·매칭에 시간이 걸려 발생하는 단기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숙련·지역·산업 등에서 맞지 않거나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이 유지되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침체로 총수요와 생산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자연실업률은 경기적 실업을 제외하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존재할 때의 실업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실업보험은 실직자의 구직 기간 중 소득을 보전하므로 일자리를 서둘러 받아들일 유인을 약화하고 탐색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마찰적 실업과 자연실업률을 낮추기보다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켜 자연실업률을 하락시킨다'이며, 올바르게는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이다.
② O — 경기변동,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총수요와 생산의 감소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다.
③ O — 효율성임금이론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력·생산성·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결과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많아져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④ O — 내부자는 이미 고용되어 임금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근로자이고, 외부자는 실업자 등 고용 밖의 근로자이다. 내부자가 임금 인하를 막아 높은 임금을 유지하면 노동수요가 줄어 외부자의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
⑤ O —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실효성을 가지면 노동공급은 늘고 노동수요는 줄어 초과 노동공급이 발생한다. 이러한 임금 경직성은 구조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긍정적 기능을 실업 감소 효과로 곧바로 연결하는 데 있다. 실업보험은 구직자의 탐색 여유를 늘려 마찰적 실업의 지속 기간과 자연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기변동에 따른 총수요 부족이면 경기적 실업, 탐색 시간이 원인이면 마찰적 실업, 임금 경직성이나 숙련·산업 간 불일치가 원인이면 구조적 실업으로 판단한다. 실업보험은 탐색 기간을 늘릴 수 있고, 효율성임금·내부자 영향·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은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하여 실업을 만들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실업보험은 탐색 기간을 늘리고, 높은 경직적 임금은 노동의 초과공급을 만든다.

NoteBase

문 121.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인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4L + 100$이다.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이고 생산물가격은 200이다. 노동공급곡선이 $w = 5L$인 경우, 이윤극대화가 달성되는 노동의 한계요소비용과 한계수입생산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투입량, w는 임금이다.)

① 400, 400

② 400, 600

③ 600, 800

④ 800, 800

⑤ 900, 9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노동수요독점에서 노동공급곡선으로부터 한계요소비용을 구하고, 이를 한계수입생산과 일치시켜 이윤극대화 노동량과 두 한계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는 $Q = 4L + 100$이므로 노동의 한계생산은 $MPL = 4$이다.
생산물가격은 200이고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이므로 한계수입은 가격과 같은 200이다.
노동공급곡선은 $w = 5L$이다. 노동수요독점자는 노동량을 늘릴 때 모든 고용분에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w와 한계요소비용 MFC을 구분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MRP = MR \times MPL = P \times MPL$
$TFC = wL, \qquad MFC = \frac{d(TFC)}{dL}$
$MFC = MRP$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므로 $MR = P$이고, 노동수요독점자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추가 노동 1단위의 비용인 MFC와 추가 수입인 MRP가 같은 것이다.

계산 과정

1. 한계수입생산은 $MRP = 200 \times 4 = 800$이다.
2. 총요소비용은 $TFC = wL = (5L)L = 5L^2$이므로 $MFC = \frac{d(5L^2)}{dL} = 10L$이다.
3. 이윤극대화 조건 $MFC = MRP$를 적용하면 $10L = 800$이므로 $L = 80$이다.
4. 이때 $MFC = 10 \times 80 = 800$이고 $MRP = 800$이다. 따라서 두 값은 순서대로 800, 8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400, 400은 틀리다. $L = 80$에서 400은 임금 $w = 5L$의 값일 뿐이며, 한계요소비용과 한계수입생산은 모두 800이다. 올바르게는 800, 800이다.
② X — 400, 600은 틀리다. 첫 번째 400은 임금을 한계요소비용으로 잘못 본 값이고, 한계수입생산은 $200 \times 4 = 800$이므로 600도 성립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800, 800이다.
③ X — 600, 800은 틀리다. 한계수입생산 800은 맞지만, $MFC = 10L$이고 $L = 80$이므로 한계요소비용은 600이 아니라 800이다. 올바르게는 800, 800이다.
④ O — 이윤극대화 노동량 $L = 80$에서 한계요소비용과 한계수입생산은 각각 800, 800이다.
⑤ X — 900, 900은 틀리다. 이윤극대화에서는 두 한계값이 같아야 하지만, 이 문제의 한계수입생산은 생산물가격과 노동의 한계생산으로 결정되어 800이다. 올바르게는 800, 800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이윤극대화 노동량 $L = 80$에서의 임금 $w = 5L = 400$을 한계요소비용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총요소비용은 $5L^2$이고 한계요소비용은 그 미분값인 $10L$이므로, 이 문항에서는 임금의 두 배가 된다. 또한 두 값이 같다는 조건만 보고 ⑤를 고르면 안 되며 실제 MRP 값도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수요독점 계산에서는 먼저 $MRP = P \times MPL$을 구하고, 다음으로 $TFC = w(L)L$을 만든 뒤 이를 미분하여 MFC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MFC = MRP$를 적용하고, 임금과 한계요소비용을 구분하여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우상향 노동공급에서 임금은 평균요소비용이고, 한계요소비용은 총요소비용을 미분한 값이다. 노동수요독점의 고용량은 $MFC = MRP$에서 결정된다.

NoteBase

문 122.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비교는 절대값으로 한다.)

① 소득과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임금률 상승 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② 소득과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임금률 하락 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③ 소득과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임금률 하락 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요인이다.

④ 소득과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임금률 상승 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 감소요인이다.

⑤ 소득은 정상재이지만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임금률 상승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구분하고, 두 효과의 크기로 순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효과: 임금률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며, 임금률이 하락하면 반대로 노동공급을 줄인다.
소득효과: 여가가 정상재이면 실질소득 증가 시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고, 실질소득 감소 시 여가를 줄여 노동공급을 늘린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이 방향이 반대가 된다.
순효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이면 절대값이 더 큰 효과가 노동공급의 최종 방향을 결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임금률 상승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정상재인 여가에 대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인다. 대체효과가 더 크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노동공급은 감소한다"이다. 임금률 하락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지만, 정상재인 여가에 대한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감소로 여가를 줄여 노동공급을 늘린다. 소득효과가 더 크므로 올바르게는 "노동공급은 증가한다"이다.
③ O. 임금률이 하락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여가를 늘리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④ O. 임금률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재인 여가의 수요가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⑤ O. 임금률 상승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린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증가의 소득효과도 여가를 줄여 노동공급을 늘리므로,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 증가 방향으로 작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에서는 임금률 하락의 소득효과 방향을 거꾸로 판단하기 쉽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임금률 하락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여가 소비도 감소하므로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따라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는 조건은 노동공급 감소가 아니라 증가를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임금률 상승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증가, 임금률 하락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로 정한다. 다음으로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는 대체효과와 반대 방향, 여가가 열등재이면 같은 방향으로 정한다. 두 효과가 반대이면 절대값이 더 큰 효과의 방향을 최종 답으로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여가가 정상재이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충돌하고, 여가가 열등재이면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NoteBase

문 123. B국의 총생산함수는 $Y = AK^{\alpha}L^{(1-\alpha)}$이다. 생산요소들이 한계생산물만큼 보상을 받는 경우, 자본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율은? (단, Y는 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0 < \alpha < 1$,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이다.)

① α

② $1-\alpha$

③ $\frac{\alpha}{Y}$

④ $\frac{1-\alpha}{Y}$

⑤ $\frac{1-\alpha}{\alpha}$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각 생산요소가 한계생산물만큼 보상받을 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구해 그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는 $Y = AK^{\alpha}L^{1-\alpha}$이다.
자본의 보상률은 자본의 한계생산물 MP_K, 노동의 보상률은 노동의 한계생산물 MP_L과 같다.
구해야 하는 값은 자본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율, 즉 $\frac{MP_L L}{MP_K K}$이다.

사용할 공식

$MP_K = \frac{\partial Y}{\partial K} = \alpha A K^{\alpha-1}L^{1-\alpha}$
$MP_L = \frac{\partial Y}{\partial L} = (1-\alpha)AK^{\alpha}L^{-\alpha}$
생산요소가 한계생산물만큼 보상받으므로 자본소득은 $MP_K K$, 노동소득은 $MP_L L$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자본소득은 $MP_K K = \alpha A K^{\alpha}L^{1-\alpha} = \alpha Y$이다.
2. 노동소득은 $MP_L L = (1-\alpha)AK^{\alpha}L^{1-\alpha} = (1-\alpha)Y$이다.
3. 따라서 자본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율은 $\frac{(1-\alpha)Y}{\alpha Y} = \frac{1-\alpha}{\alpha}$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α는 총생산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이다. 비율의 분모인 자본소득만 반영한 표현이며, 올바른 노동소득 대 자본소득의 비율은 $\frac{1-\alpha}{\alpha}$이다.
② X — $1-\alpha$는 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몫이다. 자본소득과 비교한 비율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frac{1-\alpha}{\alpha}$이다.
③ X — $\frac{\alpha}{Y}$는 자본소득분배율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두 소득의 비율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노동소득 $(1-\alpha)Y$를 자본소득 αY로 나눈 $\frac{1-\alpha}{\alpha}$이다.
④ X — $\frac{1-\alpha}{Y}$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두 소득의 비율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frac{(1-\alpha)Y}{\alpha Y}=\frac{1-\alpha}{\alpha}$이다.
⑤ O — 노동소득 $(1-\alpha)Y$를 자본소득 αY로 나누면 $\frac{1-\alpha}{\alpha}$가 된다.

오답 포인트

α와 $1-\alpha$는 각각 자본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이지, 두 소득 사이의 비율 자체가 아니다. 또한 '자본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율'은 노동소득을 분자로, 자본소득을 분모로 놓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요소가 한계생산물만큼 보상받으면 먼저 각 한계생산물에 해당 요소량을 곱해 요소소득을 구한다. 그다음 'A에 대한 B의 비율'은 $\frac{B}{A}$로 놓아 분자와 분모를 결정한다.

암기 포인트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지수는 해당 요소의 소득분배율이다. 자본소득은 αY, 노동소득은 $(1-\alpha)Y$이다.

NoteBase

문 124.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금격차는 인적자본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② 임금격차는 작업조건이 다르면 발생할 수 있다.

③ 임금격차는 각 개인의 능력과 노력 정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④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완전해도 발생할 수 있다.

⑤ 임금격차는 차별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노동시장의 임금격차가 생산성 차이, 일자리 특성, 시장의 불완전성, 차별 등 여러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 교육·훈련·경력처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요소의 차이가 임금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보상적 임금격차: 위험성, 쾌적성, 근무시간 등 비금전적 작업조건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임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차별에 따른 임금격차: 생산성과 무관한 성별·인종 등의 특성을 이유로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은 임금격차의 한 원인일 뿐이며, 차별이 없어도 생산성이나 작업조건이 다르면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교육, 훈련, 경력 등 인적자본이 다르면 한계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② O — 위험하거나 불쾌한 작업에는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한 추가 보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③ O — 능력과 노력 정도가 다르면 노동생산성이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④ O — 노동시장 정보가 완전하더라도 노동자의 생산성이나 일자리의 작업조건 자체가 서로 다르면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차별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차별이 없어도 인적자본·능력·노력·작업조건 등의 차이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차별을 임금격차의 유일한 원인처럼 제시한다. 차별이 임금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과 모든 임금격차가 차별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은 서로 다르다. 또한 ④의 완전정보는 정보 부족을 없앨 뿐, 노동자와 일자리의 실제 차이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격차의 원인을 생산성 차이, 작업조건에 대한 보상, 정보의 불완전성, 차별로 나누어 판단한다. '오직',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처럼 원인을 하나로 제한하는 표현은 다른 원인으로도 격차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임금격차는 인적자본·능력·노력·작업조건·정보·차별 등 여러 원인에서 발생하며, 차별이 없어도 임금격차는 존재할 수 있다.

NoteBase

문 125. 총인구 200명, 15세 이상 인구 100명, 비경제활동인구 20명, 실업자 40명인 A국이 있다. A국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작성 방식에 따른다.)

① 40, 20, 40

② 40, 50, 20

③ 80, 20, 20

④ 80, 40, 50

⑤ 80, 50, 2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뒤,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의 분모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15세 이상 인구는 100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0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80명이다.
경제활동인구 80명 중 실업자가 40명이므로 취업자는 40명이다.
총인구 200명은 세 비율의 분모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100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 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각 비율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취업·실업 상태를 서로 다른 분모로 측정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경제활동인구는 $100 - 20 = 80$명이다.
2. 취업자는 $80 - 40 = 40$명이다.
3. 경제활동참가율은 $\frac{80}{100} \times 100 = 80\%$이다.
4. 고용률은 $\frac{40}{100} \times 100 = 40\%$이다.
5. 실업률은 $\frac{40}{80} \times 100 = 5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40, 20, 40」은 세 값이 모두 틀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80/100 = 80%, 고용률은 40/100 = 40%, 실업률은 40/80 = 50%이므로 올바르게는 「80, 40, 50」이다.
② X — 「40, 50, 20」은 세 비율의 분모와 해당 인구를 잘못 대응한 값이다. 경제활동인구 80명과 취업자 40명을 각 공식에 대입하면 올바르게는 「80, 40, 50」이다.
③ X — 경제활동참가율 80%는 맞지만 「고용률 20%, 실업률 20%」가 틀리다. 고용률은 취업자 40명을 15세 이상 인구 100명으로 나눈 40%이고, 실업률은 실업자 40명을 경제활동인구 80명으로 나눈 50%이므로 올바르게는 「80, 40, 50」이다.
④ O — 경제활동참가율 80%, 고용률 40%, 실업률 50%가 계산 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⑤ X — 경제활동참가율 80%는 맞지만 「고용률 50%, 실업률 20%」가 틀리다. 고용률은 40%이고 실업률은 50%이므로 올바르게는 「80, 40, 50」이다.

오답 포인트

실업자 40명을 15세 이상 인구 100명으로 나누어 40%를 실업률로 판단하기 쉽다. 실업률의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80명이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20명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니므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로 인원수를 완성한다. 그다음 참가율과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삼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참가율·고용률의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다.

NoteBase